

매장문화재 개발과 보존

이해관계의 줄다리기에 위태로운 문화재

역사 품은 채 방치된 문화재

이해관계 충돌과 미흡한 법

“도시계획법과 연계 필요해”

최근 김해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월,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의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해 주변을 정비하던 중 시공사가 박석(묘역을 표시하기위해 깬 돌)을 걷어냈다. 이 과정에서 들어난 돌과 돌 밑의 문화층이 훼손됐다.

김해시 사례를 비롯해 매장문화재가 개발 과정에서 임의로 훼손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훼손은 문화재 가치에 관한 무지, 이해관계의 갈등과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 등으로 발생한다.

무지함으로 문화재 훼손

김해시 구산동 고인돌 바닥에는 80m 길이 규모로 박석이 놓여 있었다. 일반적인 고인돌에는 돌들이 깔려 있지 않다. 이는 구산동 지석묘가 평범한 묘는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지석묘 훼손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부주의함과 무지함을 꼽는다. 박석을 들어낸 것은 지석묘의 가치를 알지 못해 발생한 문화재 훼손이다.

지난 5월에는 강원도 춘천 소재의 레고랜드가 유적지 훼손 논란 속에 그 문을 열었다. 개장 후에도 레고랜드의 유적지 훼손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 유적인 춘천 중도 유적 위에 테마파크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오동철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은 중도 유적을 “우리나라 고대사를 다시 쓸 유적”이라고 설명했다. 중도 유적은 고조선의 영역을 바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은 고조선의 남단 영역을 황해도까지로 생각했다. 춘천 중도 유적에서 고조선의 대표 지표물로 볼 수 있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청동 도끼와 밀이 좁은 바리모양토기 등이 발견되며 고조선의 영역이 더 넓었을 가능성이 점쳐졌다.

또한 중도 유적은 유물이 밀집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동철 사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많은 유적이 발굴된 사례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춘천에 고대국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축구장보다 큰 면적의 거대한 ‘환호(주위에 방어 도랑을 두른 취락)’도 여러 개 발견됐다. 환호 내부에 주거지가 밀집된 것으로 보아 성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동철 사무국장은 “성 내부에 사는 사람과 외부에 사는 사람이 구분됐었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획된 집단 묘역의 흔적으로 보이는 고인돌 48기는 현재 복원을 목적으로 해체돼 비닐에 덮겨 방치돼 있다. 오 사무국장은 “중요 매장문화재가 비닐에 8년 동안 방치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에 유적 전시관과 유적 공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춘천역사문화연구회는 지자체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문화재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와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통보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현재 춘천역사문화연구회와 시민단체는 정부에 춘천 중도 일대의 사적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20년간 방향하는 풍납토성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문화재 보존 주장 간 이해관계 충돌에는 풍납토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이형구 동양고고학연구소 소장은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1980년대 초부터 노력하고 있다. 1963년 풍납토성이 사적 11호로 지정됐지만, 성 내부는 제외됐고 성과의 일부만 해당됐다.

백제의 최후 도성인 풍납토성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백제의 역사를 바꿔 놓은 매장문화재다. 2013년 이전 한국사 교과서에는 백제 건국 이후 493년간의 한성백제의 역사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는 춘천 중도 유적 훼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춘천 중도 유적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선사 유적이다.

가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백제의 도읍지로는 공주와 부여만이 언급됐다. 이형구 소장은 “한성백제의 역사는 4세기에서 6세기경 일본 정권이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반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형구 소장은 풍납토성 아파트 건설로 인해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1999년, 풍납토성 내에서 발굴된 백제 초기의 왕경 유적·유물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라도 아파트 공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소장은 아파트 공사를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보상하자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유적 위로 아파트 단지



풍납토성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사헌부의 문 터는 광화문 광장에 노출 보존돼 관람이 가능하다.

가 조성됐다.

주민들은 이형구 소장의 계속되는 발굴, 보존 활동으로 인해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고, 이 소장을 향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2006년 이 소장을 컨테이너에 감금했으며 이형구 소장의 화형식을 계획하기도 했다.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이해관계 충돌의 극한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0년간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풍납동 일대가 개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이미 풍납2동 복합청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에 대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풍납토성은 여전히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의 중심에 있다.

문화재법도 이제는 변화해야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는 개발이 중시되던 시기였다. 채미옥 미래국토 연구그룹 대표는 “당시 전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발굴 비용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표조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지만, 발굴 비용은 여전히 시공업체 측에서 전면 부담한다. 문화재 발견 즉시 국가 소유로 귀속되고 시공업체 측에서 발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정책이 계속되면 아파트 등의 건설 과정에서 임의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는 사건이 앞으로로도 발생할 수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발견되는 순간 공사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발굴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간다.

채미옥 대표는 구제발굴, 즉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국가 차원에서 미리 조사한 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대표는 “매장문화재 보존이 잘 된 사례는 공공 측에서 발굴조사한 경우가 많다”며 “구제발굴이 아닌 공공발굴을 확대해 매장문화재 보존의 좋은 사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의 모호한 측면으로 인한 유적지 갈등의 예로 김포 장릉 아파트를 들 수 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아파트가 장릉의 경관을 훼손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대법건설 외 2개 건설사가 공사 중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9일, 1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서는 주거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장릉과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구역의 확대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한 혹여 김포 장릉 아파트의 토지가 문화재 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조례나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시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채미옥 대표는 김포 장릉 아파트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도시계획법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주변을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법과 문화재보호법이 공존해야 실효성을 갖기 때문이다. 채 대표는 “문화재 보존을 뒷받침하는 법들과 함께 문화재청이 제 역할을 다해야 진정한 문화재 보호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보존이 잘 이뤄진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광화문 광장은 재조성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원위치에 보존했다. 해당 매장문화재는 조선시대 주요 관청 터의 실체를 최초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중 사헌부의 문이 있던 터는 보존상태가 양호해 관람이 가능하도록 노출 보존했으며 육조거리 터의 흔적은 흙으로 덮여 보존한 뒤 그 위에 담장과 배수로의 모습을 재현했다.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은 오늘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역사와 개발의 공존은 여전히 현대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글 | 이가림 기자 forest@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

사진제공 |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이미지출처 | 레고랜드, 문화재청

